

중국 9기 전인대 2차회의 결과분석:  
수정헌법 분석을 중심으로

1999. 3

신상진 (국제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I. 문제제기 .....	1
II. 1999년 중국의 국정방침 심의·확정 .....	3
1. 대내정책 .....	3
2. 대외정책 .....	6
III. 중국의 수정헌법 내용과 의미 .....	8
1. 헌법 개정 과정 .....	8
2. 8차 수정헌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 .....	9
IV. 중국의 수정헌법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주는 시사점 .....	12
1. 중국과 북한 헌법 비교 .....	12
2.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시사점 .....	13
V. 우리의 고려사항 .....	16
<부록 1> 중국의 수정헌법 조문	
<부록 2> 북한의 수정헌법 조문	

## I. 문제제기

○ 중국은 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제2차회의를 개최(3. 5~15)하여 「정부공작보고서」, 「1999년 경제계획과 예산안」 및 「헌법 수정안」 등을 심의·확정하였음.

- 전인대는 헌법상 국가 최고 권력기관으로써 국가 업무에 대한 입법권과 감독권 뿐만 아니라 주요 지도자 임면권과 국가 중대사에 대한 심의·결정권을 가지고 있음.<sup>1)</sup>

- 그러나 중국의 모든 중요한 국가정책은 실제로 공산당중앙에 의해서 결정되며, 전인대는 공산당이 결정·하달한 안건을 통과시키는 ‘고무도장’에 불과함.<sup>2)</sup>

○ 이번 전인대는 경제성장을 둔화와 실업률 증가 및 부정부패 만연으로 사회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이 이들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분석·전망하는데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임.

○ 특히 이번 전인대에서 중국은 사유제를 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인정하는 「헌법수정안」을 통과시켜 시장경제 도입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결정하였는 바, 이 보고서는 이번 전인대에서 나타

---

1) 浦興祖 主編, 「當代中國政治制度」(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2), pp. 21, 25~26.

2) 이번 전인대에서도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건의한 「헌법수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음.

난 중국의 국정방향을 분석·전망하는 동시에 북한헌법과의 비교를 통해 중국의 수정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중점 분석하고자 함.

## Ⅱ. 1999년 중국의 국정방침 심의·확정

○전인대 폐막당일 발표된 「정부공작보고서」를 통해 볼 때, 1999년도 중국의 대내외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것임.

- 대내 안정과 단결 도모
- 대외 실리 추구

### 1. 대내정책

○중국은 개혁, 발전 그리고 안정을 1999년 3대 국가정책 지표로 설정, 경제개혁 조치를 심화하고 정치·사회 안정을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음.

○중국은 국유기업 개혁과 금융개혁을 핵심 경제개혁 과제로 제시함으로써 21세기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금융위기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였음.

-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는 국유기업을 개혁하기 위해 정부·기업의 분리, 전문경영인 영입, 부실기업 정리 및 중복투자 방지에 역점을 둠.
- 금융위기 방지와 금융체제 강화를 위해 금융시스템 현대화와 과다 인원·기구 감축 방침을 제시함.<sup>3)</sup>

---

3) 최근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관치금융 관행으로 인하여 경영상태가 부실화하여

○ 국유기업과 정부기구 개혁 과정에서 대규모 정리해고(下崗)자가 발생(현재 약 1,500만명 추산)하고 있는 바,<sup>4)</sup> 중국은 실업자문제 해소를 위해 사회기간시설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임.

-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3,415억원(약 410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임.

○ 또한 중국은 7% 정도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물가상승율을 2% 대로 안정시킨다는 내용의 경제발전 계획을 제시하였음.

- 성장률을 7% 대로 결정한 이유는 ① 도시실업자 급증, ②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 ③ 과거 양적 팽창정책에 따른 폐해 때문임.

<표 1> 1998년 경제실적과 1999년 경제계획

항 목	1998년 실적	1999년 계획
GDP성장률	79,553억원(7.8% 성장)	7% 내외
고정자산투자	28,475억원(14.1% 증가)	12% 내외
수출입	3,240억달러(0.4% 감소)	일정수준 증가
소매물가	2.6% 하락	2% 이내
실업률	3.1%	3.5% 내외

자료: 曾培炎, “關於去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計劃執行情況與今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計劃草案的報告,” 「人民日報」, 1999. 3. 7.

「광동국제투자신탁공사」, 「해남개발투자신탁」 등이 파산되는 등 금융불안 상황이 조성되고 있음.

- 4) 중국의 ‘下崗노동자’는 실직자이지만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기본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보장받고 있음. 중국정부는 재취업 교육과 최소 생활비 보조를 통해 실직자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음.

- 아시아 경제위기와 세계경제의 집단화 추세 속에서 수출증대를 통해 7% 대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중국은 내수확대 정책을 지속하기로 하였음.
- 중국은 정부기능의 효율화와 경제개혁 가속화를 위한 환경조성 차원에서 1998년부터 정부기구 개혁작업을 대담하게 추진해 왔는데, 5) 금년에는 지방정부 기구·인원 축소개편에 주안점을 두고 정부기구 개혁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또한 중국은 실업을 증가,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 증폭, 민주화운동의 조직화 경향으로 사회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엄정한 법률 적용과 부정부패 척결작업 강화 방침을 밝혔음.
  - 금년 초부터 중국공산당은 현급이상 당·정 지도자들에게 「3講」(講學習, 講政治, 講正氣) 교육을 주창하면서 사상학습과 기율을 강화해 왔음.<sup>6)</sup>
  - 금년은 1989년 6.4 天安門사건 발발 10주기로 중국은 민심안정을 도모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sup>7)</sup>

5) 1998년 1년 동안 중국은 중앙 정부기구 개혁을 단행하여 40개 중앙부처를 29개로 축소하고 인력도 약 50%를 감축(약 15,000명)하였음.

6) 「人民日報」, 1999. 3. 18.

7) 금년 초 중국정부 기관지인 「瞭望」은 권두언에서 민심이 안정되어야 국가가 태평하다는 논지의 글을 게재한 바 있음. 評論員, “民安國泰,” 「瞭望」, 1999年 第7-8期 (1999. 2. 15), p. 1.



## 2. 대외정책

- 중국은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대내 경제발전에 유리한 대외여건을 조성하고 21세기 국제질서 주도국가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였음.
  - 지역안정 유지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 주변국과의 선린우호관계 증진과 개발국과의 관계개선을 지속 추진함.
  - 아시아와 세계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인민폐 가치 유지방침을 밝힘.
  
- 중국은 북한, 한국과의 선린우호관계가 한층 발전되고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남북한에 대해 균형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였음.
  - 1998년에는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한국과는 호혜협력관계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함으로써 북한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음.
  
- 대외경제정책과 관련, 중국은 대외무역 확대를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서비스무역 개방 등 투자환경 개선조치를 통해 외자유치를 확대할 것임을 천명하였음.

서비스무역 개방방침 표명은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위한 환경 조성 차원으로도 분석됨.

### Ⅲ. 중국의 수정헌법 내용과 의미

#### 1. 헌법 개정 과정

○ 중국은 1954년 헌법을 제정하였으며, 1975년, 1978년, 1982년 세 차례에 걸쳐 전면 개헌하고, 1988년과 1993년에는 1982년 헌법을 부분 수정하였음.

<표 2> 중국의 헌법 개정 역사

헌 법	개헌연도	주요 내용
제헌헌법	1954년	사회주의 국가건설 강조
1차 개헌	1975년	문화대혁명 노선 강조, 계급투쟁 중시, 당의 우위 강조
2차 개헌*	1978년	문화대혁명 종결, 4개 현대화 노선 명기
3차 개헌	1982년	개체경제·국영기업의 자주경영과 외국인 투자인정, 국가주석제 부활
6차 수정헌법	1988년	사영경제 지위 제한적 인정, 토지 사용권 전매 허용
7차 수정헌법	1993년	사회주의초급단계 규정,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행, 국영기업을 국유기업으로 개칭

\* 2차 개헌 헌법은 1979년과 1980년 두차례 부분적으로 수정됨.

## 2. 8차 수정헌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

○ 이번 전인대에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건의한 헌법수정안을 심의·통과시켰는데,<sup>8)</sup> 8차 수정헌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는 다음과 같음(수정헌법 전문은 <부록 1> 참조).

- 중국의 헌법수정안은 전인대 대표 2/3 이상 찬성으로 통과되는데, 이번 수정안은 총 유효투표수(2,856)중 98% 이상의 찬성(2,811)으로 통과되었음.

### 가. 덩샤오핑(鄧小平)이론의 국가 지도이념 격상

○ 중국은 덩샤오핑이론을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사상과 함께 국가지도 이념으로 공식 격상시켰음(헌법 서문).

○ 또한 중국은 “현재 중국이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 있다”는 구절을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할 것”이라고 수정하였음.

○ 이는 중국이 앞으로도 시장경제 개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며, 최고 지도자로서 장쩌민(江澤民)의 지위가 확고해졌다는 것을 의미함.

---

8)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1999년 1월 22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헌법수정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번 전인대에서 헌법수정안을 심의·통과시켰음. “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關於修改憲法部分內容的建議,” 「人民日報」, 1999. 1. 31.

- 이번 전인대 개막 직후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장쩌민 직계인 쑹칭홍(曾慶紅)이 당조직과 인사권을 담당하는 중앙조직부장에 발탁되었음.<sup>9)</sup>

## 나. 사유제경제 지위 강화

○ 중국은 “개체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경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고 명기함으로써 사유경제의 지위를 강화하였음(헌법 11조).

- 1988년 수정된 헌법에서는 “사영경제는 사회주의 공유제 경제의 보충이다”라고만 규정하였음.

○ 헌법 6조에서도 “공유제를 견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소유제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음.

○ 중국이 헌법에서 사유제경제 지위를 강화한 것은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영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임.

- 국유기업과 정부기구 개혁과정에서 파생되는 실업자들을 흡수하기 위해서도 사영기업 발전을 유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sup>10)</sup>

9) 「文匯報」(香港), 1999. 3. 19.

10) 1998년 중반까지 중국의 개체기업과 사영기업이 중국내 전체 실업자의 40%에

- 또한 국유기업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되는 반면 사영기업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현실적 이유도 이번 수정헌법에서 사유제경제의 지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음.<sup>11)</sup>

#### 다. 사회주의법치 강조

- 중국은 이번 수정헌법에서 “법에 의해 국가를 다스려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음(헌법 5조 1항).
  - 최근 중국에서는 공직자 부정부패가 심화되고 사회치안이 악화됨으로써 사회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바, 사회안정과 대내단결도모차원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였음.
- 또한 중국은 ‘반혁명활동 진압’이라는 표현을 ‘국가안전 침해 범죄활동 진압’으로 수정하였는데(헌법 28조), 이는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됨.
  - 중국은 1998년 10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에 따른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과시할 필요가 있었음.

---

달하는 400만명의 「下崗」 노동자를 흡수함으로써 실업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음. <http://www.wenweipo.com/wwwp/data/t2-content-ww980921yo02.html>; 「經濟參考報」, 1999. 3. 4.

- 11) 현재 중국의 국유기업은 중국 국민총생산액의 34%, 대외무역 총액의 50%, 도시노동자 고용의 55%, 공업생산의 27%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고, 그 외는 집체기업과 사영경제가 담당하고 있음.

## IV. 중국의 수정헌법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주는 시사점

### 1. 중국과 북한 헌법 비교

-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헌법은 통치이념, 권력구조 및 국정방침을 명기하고 있는 바, 중국과 북한의 헌법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서도 이들 양국의 정책변화 방향을 설명할 수 있음.
- 중국과 북한은 공히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나, 추구하는 이념은 서로 상이함.
  - 중국은 실사구시론을 표방하는 덩샤오핑이론을 국가 지도이념으로 강조하는 반면, 북한은 여전히 김일성 주체사상을 국가 통치이념으로 설정하고 있음.
- 중국헌법에서는 현단계 중국을 ‘사회주의 초급단계’로 규정하여 자본주의 도입을 정당화하고, 현대화건설을 국가의 기본 임무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 북한헌법은 주체노선을 견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은 1993년부터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을 헌법규정을 통해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헌법에서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국가’ 발전을 추구한다고만 밝히고 있음.

○중국헌법에서는 사유제 허용 규정을 철저히 명시함으로써 중국인들의 노동의욕을 자극하고 있으나, 북한헌법은 주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할 만큼 명확하게 개인소유 규정을 명시하지 못하고 있음.

- 중국은 개체경제와 사영경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고 하고 있으나, 북한은 개인소유를 국가소유와 사회소유를 보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2.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시사점

○중국은 경제개혁·개방을 적극화 하기 이전 기존의 통치이념에 대한 재평가와 사상해방을 거쳤으나, 북한은 여전히 김일성 주체사상을 국가 지도이념으로 고수함으로써 정책변화에 제약을 받고 있음.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자본주의의 장점을 대폭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사상해방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는 바, 중국의 사상해방 과정은 다음과 같음.

- 마오쩌둥 사후 '범시파'와 '실사구시파' 간의 사상논쟁에서 '실사구시파'가 승리(1978. 12)함.<sup>12)</sup>

---

12) '범시파'는 마오쩌둥(毛澤東) 노선을 지지하였던 화궈펑(華國鋒)과 왕둥싱(汪東興) 등이 이끌었으며, '실사구시파'는 덩샤오핑(鄧小平)과 후야오방(胡耀邦) 등 개혁파를 뜻함. 마오쩌둥 사망과 '4인방' 숙청 이후 '범시론'과 '실사구시론' 간의 중국내 사상논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湯應武, 「抉擇: 1978年以來中國改革的歷程」(北京: 經濟日報出版社, 1998), pp. 50~76 참조.



- 중국 공산당 11기 6중전회에서 문화대혁명 이후 마오쩌둥의 정책적 오류를 비판(1981. 6)함.
- 중국 공산당 13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를 제시하여 자본주의 도입을 합법화 하고,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을 역설(1987. 11)함.
- 8기 전인대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행을 헌법에 명기(1993. 3)함.
- 중국 공산당 15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덩샤오핑이론을 당의 행동 지침으로 규정하고, 사유제를 공식 인정(1997. 9)함.
- 9기 전인대 2차회의에서 덩샤오핑이론과 사유제를 헌법으로 보장(1999. 3)함.

○그러나 북한에서는 아직도 김일성 주체사상이 최고 통치이념으로 견지되고 있고, 과거 김일성의 통치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북한은 1998년 개정된 신헌법을 '김일성헌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중국에서는 공산당 규약에서 자본주의의 장점 도입을 합법화 하고 있으나, 북한의 로동당 규약은 아직 개혁·개방정책 채택을 정당화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고 있음.

- 권력구조의 특성상 중국과 북한의 모든 중요한 정책은 당의 결정이 없으면 불가능함.

- 따라서 현단계에서 북한이 중국과 같은 대담한 경제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북한은 1970년대 말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단계와 같이 소수 관료와 학자의 해외파견, 제한지역내 해외 관광객과 투자 유치, 독립채산제의 부분적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임.

## V. 우리의 고려사항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과 같은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강경정책 보다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국이 적극적인 경제개혁·개방을 실시하기 이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중 관계개선을 통해 중국을 국제사회로 편입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는 중국의 경제개혁·개방을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sup>13)</sup>
-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내 개혁·개방 세력을 조직화 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중국은 「정부공작보고」에서 남북한에 대한 균형외교정책 추진방침을 천명하면서도 북한의 지전략적 중요성을 경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바, 정부는 북한의 정책변화 유도 등 한반도문제에 대한 한·중공조 강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

- 주룽지(朱鎔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전인대 폐막 당일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알지 못하며, 북한이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을 간섭할 수 없다고 밝혔다.

---

13) 특히 1969년 조우언라이(周恩來)와 린뱌오(林彪)간 대외정책 노선을 둘러싼 대립이 전개되었는데, 1971년 이후 미국의 대중 접촉정책은 서방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주장하였던 조우언라이의 입지를 강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최근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개발 문제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중·미간 갈등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큰 바, 정부는 향후 중·미관계 변화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 한반도문제 악화는 중·미 모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논리를 강조함으로써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미간 이견 발생 소지를 차단함.

○금년은 중·북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라는 점에서 중·북간 최고 지도자 교환방문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바, 정부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하도록 대중 외교노력을 강화해야 함.

-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장쩌민주석의 방한을 추진함.

○한편, 중국은 내수확대를 목적으로 사회기간시설 투자를 대폭 확대할 방침으로 있는 바, 정부는 국내기업들의 중국내 토목건설사업 진출을 적극 독려·지원할 필요가 있음.

○금년내 중·미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 바,<sup>14)</sup> 정부는 새로운 여건에 부합하는 중국시장 진출전략

---

14) 주룽지 총리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협상이 이미 13년을 경과하였다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협상이 타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人民日報」, 1999. 3. 16.

을 강구해야 함.

- 특히 중국의 금융·서비스분야 개방확대 가능성에 대비, 이들 분야에 대한 진출방안을 적극 모색함.

## <부록 1> 중국의 수정헌법 조문

### 1. 서문

중국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사업의 성취는 중국공산당이 중국 각민족을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의 지도하에 진리를 견지하고 오류를 수정하고 수많은 난관을 극복함으로써 획득하였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오랜 기간동안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할 것이다. 국가의 근본 임무는 중국식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모든 역량을 다해 사회주의 현대화를 건설하는 것이다. 중국의 각민족은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이론의 지도하에 인민민주독재를 견지하고, 사회주의를 견지하며 개혁 개방을 지속함으로써 끊임없이 사회주의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며 사회주의민주 발전과 사회주의법제를 실현해야 한다. 자력갱생과 분투노력을 통해 공업, 농업, 국방과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하여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화된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해야 한다.

### 2. 5조 1항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의해 국가를 다스리며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 3. 6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공유제, 즉全民소유제와 노동군중 집체소유제이다. 사회주의 공유제는 착취제도를 소멸시키고 각자가 가진 능력을 다하며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을 지킨다. 국가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공유제를 위주로 다양한 형태의 소유제 경제를 함께 발전시키는 경제제도를 견지하며, 노동에 따른 분배를 위주로 다양한 분배방식이 병존하는 분배제도를 견지한다.

### 4. 8조 1항

농촌집체경제 조직은 농가도급경영을 기초로 결합과 분담의 이중경영체제를 실시한다. 농촌의 생산, 판매, 신용, 소비 등 각종 형식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 집체소유제경제이다. 농촌집체경제 조직에 참가하는 노동자는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자류지, 자류산을 경영하고 가정부업과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 5. 11조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개체경제와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국가는 개체경제와 사영경제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개체경제와 사영경제를 지도, 감독, 관리한다.

6. 28조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반란과 기타 국가안전침해 범죄활동을 진압하고, 사회치안 침해, 사회주의경제 파괴와 기타 범죄활동을 저지하고, 범죄분자를 징벌하고 개조한다.



## <부록 2> 북한의 수정헌법 조문15)

### 1.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 2. 21조

국가소유는 전체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 3. 22조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는 해당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보호한다.

---

15) 중국 수정헌법과의 비교를 위해 경제관련 조문만을 부분적으로 제시함.

4. 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텃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5. 33조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수익성과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옹계 이용하도록 한다.

6. 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7. 37조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나라 법인 또는 개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창설 운영을 장려한다.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저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저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저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저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정영태	저	6,000원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김국신	저	4,000원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여인곤 김영춘 신상진외공저		10,000원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향 연구	오승렬	저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저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저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저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저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저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전성훈	저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저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이우영 김영윤외공저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저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저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저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저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전망	내구력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외공저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저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저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현경	저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저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저	5,500원
96-29	한·중 안보협력방안 연구	최춘흙	저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저	5,000원
97-02	북·일 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저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저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저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손기웅	저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외공저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공저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저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저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저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저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저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저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저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저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저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저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계	정영태	저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저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저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저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저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현경	저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저	5,5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김병로 김성철	공저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저	4,0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저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	이교덕	저	6,500원
98-07	1998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결과	최진욱 정영태 홍용표 박형중 허문영	공저	발간예정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저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저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저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저	7,500원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박영호	저	5,500원
98-13	통일독일의 균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저	5,500원
98-14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옥태환	저	4,500원
98-15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저	4,000원

98-16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김규륜	저	3,500원
98-17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8-18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8-19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최춘흠	저	3,000원
98-20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배정호	저	6,000원
98-21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 연구: 북·일관계정상화와 남북한관계	김영춘	저	3,500원
98-2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재고전략: 점진적·포괄적 구상	전성훈	저	7,500원

###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채성호외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i>	옥태환 전현준 채성호외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i>	김병로 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공저	7,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

북한인권백서 1999	최의철 송정호 공저	\$11.95
	최의철 서재진 제성호외공저	7,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96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6,000원
97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5,000원
98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000원
98-06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2,500원
<b>■ 통일문화시리즈</b>		
96-01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10,000원
96-02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b>■ 논총</b>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1998.12)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	--------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	--------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	--	--------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	--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을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본원 홈페이지에서 모든 발간물에 대한 초록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1997년~1998년 발간물은 원문을 온라인 상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관회원의 경우 담당자 1인만 가능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559, 901-2529 FAX:901-2547)



---

---

## 중국 9기 전인대 2차회의 결과분석

統一情勢分析 99-01

---

發行處 統 一 研 究 院

編輯人 統一研究院 國際關係研究室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 901-2527(代), FAX : 901-2543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266-0892

印刷日 1999년 4월 일

發行日 1999년 4월 일

---

---